

통일교육 방식과 내용에 따른 통일·평화의식의 변화

정용하·김태완*

<차 례>

1. 들어가며
 2. 대학생의 일반적인 통일·평화의식
 3. 통일교육의 적실성 평가
 4. 마치며: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언
-

1. 들어가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통일교육이 대학가에서 시작된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1980년대의 통일교육은 ‘남북의 동질성회복’, ‘민족적 관점에서의 통일노력’ 등에 주목하였고, 1990년대의 통일교육은 주로 ‘북한 바로 알기’, ‘남북 통일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 등에 주목하여 왔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남과 북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중심의 자료나 ‘제3국’을 통해 유입된 편향된 자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¹⁾ 이 시기의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정권유지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정용하,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yhachung@pusan.ac.kr); 김태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강사 (neatlife@pusan.ac.kr).

1) 과거 북한이라는 존재가 ‘주적(主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1980~90년대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통로는 안전기획부, 국토통일원 등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유포되는 자료에 국한되었고,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귀순용사’, ‘생포간첩’ 등의 이름이 붙은, ‘정부기관을 통한 북한사람’, 또는 조총련계의 재일 동포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냉전의 붕괴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 화해가 조성되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특히 국민의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달성하고 뒤이은 참여정부도 이 기조를 적극 계승하면서 남북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진보적인 논의들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과거 규제를 받았던 중국과 러시아 등 구 공산권 지역의 자료들이 발굴되고, 또한 제한적이거나 북한과의 학술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통일교육에 비해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교육이 가능해지게 되었다.²⁾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로부터 동질성을 기반으로 상호체제의 인정이라는 '민족적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본질적인 연구와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정부 및 비정부 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양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부산대학교에서 통일과 관련된 많은 강좌들이 과거보다 보다 진보적인 내용들을 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남북한정치쟁점'은 그러한 과목들 중 하나이다. '남북한정치쟁점'은 기존의 통일관련 강좌와 비교할 때, 교육방식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남북한정치쟁점'은 부산대학교 2004학년도 2학기 교양강좌로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개설한 강좌이다. 이 강좌는 이전의 '제1세대' 통일강좌인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대신하여 2003년 1학기부터 개설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2004년 2학기 강좌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특강개설 건의에 부합하여 총 8회의 특강, 2회의 종합토론회, 2회의 설문조사, 그리고 모의 6자회담 개최 등, 통일교육의 최첨단이라고 평가될 만한 '발전형 통일강좌'로 진행된 것이다.³⁾ 이처럼 교

2)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북한이라는 공간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이거나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많은 북한관련 자료가 공개되는 등 북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나 통일을 위한 시각과 사고를 마련하기 위한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육방식이 교수 1인 중심의 설명형 강의로부터 전문가 초청특강과 토론 그리고 실습 등을 편성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강좌의 내용 또한 다양하면서도 진보적이었으며 현실적인 경험들을 중점적으로 포함시켰다. 강의한 연사들 중, 이시우 작가, 김남식 선생, 강정구 교수, 서승 교수, 홍성담 화백 등은 진보적인 인사들이며, 최완규 교수, 유완영 회장, 임동원 장관 등은 현실경험과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이었다.

이 강좌를 기획하면서 우선 생각한 것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정권들이 내세운 논리와는 다른 객관적인 통일관련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음으로 연구자로서 통일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달리 할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하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지적 호기심이었다. 이러한 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강의 전부터 연구를 설계하여 이 강좌에 적용하였다. 수강생들과 비수강생들의 통일·평화의식의 차이, 수강생들의 수강전과 수강후의 통일·평화의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⁴⁾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정치쟁점’ 강좌를 중심으로 통일관련 강좌 수강생들과 비수강생 대학생들의 통일·평화의식을 조사하고, ‘남북한정치쟁점’을 수강한 학생들이 수강전과 비교하여 통일·평화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평화 의식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교육적 변수로서 통일교육의 방식과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3) 자세한 주별 강의 주제와 내용은 마지막의 <부록> 참조. 강의 원고 요약문과 전문은 부산경남통일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http://uniedu.busan.kr>) 참조.

4) 의식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정신작용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 개념인 ‘통일·평화의식’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인식, 평가,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통일과 평화와 관련하여 볼 때,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 정치권력에 대한 인상 등은 각 개인을 하여금 정치적 태도(요구와 지지)를 형성하여 행동을 하게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방법론

인간의 인식의 형성은 다양한 영향 하에서 생성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들 간의 일치감을 유지하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감은 집단구성원의 유대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 중 유명한 것은 뉴콤(Newcomb)의 ‘베닝톤(Bennington) 대학 학생들에 대한 연구’이다.⁵⁾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성향에 따라 학생들의 의식이 변화한다는 뉴콤의 연구를 원용하여 한국의 통일교육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초청 팀 티칭, 토론 및 실습 등 스스로 만들어 가는 수업)과 교육내용(진보적)이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뉴콤의 연구와는 달리 한계를 갖는다. 뉴콤은 25년이 흐른 후에도 그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여 교육의 영향이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2) 조사 설계

① 조사 시기

2004년 9월 2일~17일에 걸쳐 제1차 부산대학교 학생의 통일·평화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2004년 11월 29일~12월 9일에 실시한 제2차 의식조사를 통해 통일교육 수강생들의 생각의 변화정도를 통해 통일교육 효과를 측정하였다.

② 조사 대상

1차 조사에 대상이 되었던 708명의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각각 남학

5) 1929년 공황시기에 딸을 대학에 수학시킬 수 있는 가정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대학 교수들의 교육을 4년 동안 받고 난 후부터는 점점 민주당(루즈벨트) 지지로 바뀌는 것을 베닝톤 대학의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뉴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여자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25년 후에까지 그러한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추적조사 하여 밝혔다. 즉 1960년에 베닝톤 대학 출신의 60%가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자유적인 성향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유사한 생활수준과 배경을 가진 여성들은 전국적으로 30%의 지지만을 보였을 따름이다(Jerry L. Yeric, John R. Todd, *Public Opinion*, Illinois: Peacock Publishers, 1996, p.70).

생 364명(51.4%), 여학생 344명(48.6%)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학생 중 238명(전체 33.6%)은 병역을 마친 학생이고, 115명(16.2%)은 병역미필, 나머지 11명(1.6%)은 면제, 미신고자 등이었다(<표 1> 참조). 또한, 조사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생이 142명(20.1%), 2학년생이 164명(23.2%), 3학년생이 219명(30.9%), 4학년생이 183명(25.8%)으로 각각 구성되었다(<표 2> 참조).

<표 1> 성별·병역별 분포

문항	빈도
병역필	238 (33.6)
병역미필	115 (16.2)
기타	11 (1.6)
여학생	344 (48.6)
전체	708 (100.0)

<표 2> 학년별 분포

문항	빈도
1학년	142 (20.1)
2학년	164 (23.2)
3학년	219 (30.9)
4학년	183 (25.8)
전체	708 (100.0)

조사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세 미만이 18명(2.5%), 20세 100명(14.1%), 21세 117명(16.5%), 22세 83명(11.7%), 23세 126명(17.8%), 24세 81명(11.4%), 그리고 25세 이상 183명(25.8%)으로 각각 구성되었다(<표 3> 참조). 또한 응답자의 소속단과대학별 분포는 인문대 126명(17.8), 사회대 231명(32.6%), 자연대 49명(6.9%), 공대 72명(10.2%), 법대 66명(9.3%), 사범대 29명(4.1%), 상대 127명(17.9%), 생활환경대 1명(0.1%), 예술대 2명(0.3%), 자유전공 등 기타 5명(0.7%) 등을 이루었다(<표 4> 참조).

<표 3> 연령별 분포

연령별	빈도
20세 미만	18 (2.5)
20세	100 (14.1)
21세	117 (16.5)
22세	83 (11.7)
23세	126 (17.8)
24세	81 (11.4)
25세 이상	183 (25.8)
전체	708 (100.0)

<표 4> 단과대학별 분포

단과대학별	빈도
인문대	126 (17.8)
사회대	231 (32.6)
자연대	49 (6.9)
공대	72 (10.2)
법대	66 (9.3)
사범대	29 (4.1)
상대	127 (17.9)
생활환경대	1 (0.1)
예술대	2 (0.3)
기타	5 (0.7)
전체	708 (100.0)

③ 표본추출 및 조사방식

이상과 같은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확률적 표집이 아닌 몇몇 수업을 선정하여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표집은 2차례의 동일 설문에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대상이 되는 ‘남북한정치쟁점’강좌의 수강여부에 의한 의식변화의 차이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 배포 수거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④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제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학생들과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⁶⁾ ‘남북한정치쟁점’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따로 분리하였다.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10.0k를 이용하여, 제1차 여론조사의 빈도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일반적인 통일·평화의식을 분석하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총 8회에 걸쳐 실시한 특강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설문 문항에 대해 학기 초, 학기 말의 수강자 응답변화를 pearson chi-square(χ^2) 분석을 통해 인식태도 변화의 적실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대학생의 일반적인 통일·평화의식

1) 통일에 대한 일반적 인식

먼저,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들의 66.2%는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으며, 그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통일된 남북이 보다 강대국이 될 수 있으므로’(43.8%),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26.5%), ‘원래 남북은 단일민족이니가’(23.9%)의 순으로 응답했다. 결국 이러한 대학생들의 통일 필요

6) 제1차 여론조사와 제2차 여론조사 간 조사대상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학기 중 휴학,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제2차 여론조사에 불응한 경우가 발생하여, 동일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2차 여론조사에 불응한 제1차 여론조사 응답자의 내용은 삭제하였다.

성에 대한 인식은 민족적이거나 감정적인 이유에 있기보다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5>, <표 6> 참조).

<표 5> 통일의 필요성

문항	빈도
반드시 통일	468 (66.2)
현상 유지	140 (19.8)
통일 반대	19 (2.7)
잘 모름	52 (7.4)
기타	28 (4.0)
전체	707 (100.0)

<표 6> 통일의 이유

문항	빈도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112 (23.9)
평화정착을 위해서	124 (26.5)
이산을 극복	7 (1.5)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205 (43.8)
기타	20 (4.3)
전체	468 (100.0)

반면, 통일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현 상태 유지가 좋다’(19.8%), ‘통일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2.7%)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를 ‘사회혼란이 오므로’(62.3%), ‘지금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므로’(22.6%), ‘지금보다 더 못살게 되므로’(14.5%) 등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 현상유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한 학생들의 성향과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5>, <표 7> 참조).

대학생들은 남북 분단의 원인을 ‘미소의 권력투쟁의 산물’(59.1%), ‘우리 민족의 지도층 분열’(18.0%),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산물’(11.2%) 등의 순으로 꼽았다. 결국,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방 전후의 국제정세, 특히 미국과 소련 간 패권의 대립에 따른 권력투쟁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8> 참조).

<표 7> 통일반대·현상유지

문항	빈도
경제적 낙후	23(14.5)
사회의 혼란	99(62.3)
북측 사람들이 싫어서	0(0.0)
현재도 불편치 않음	36(22.6)
기타	1(0.6)
전체	159(100.0)

<표 8> 분단의 원인

문항	빈도
미소의 권력투쟁	418(59.1)
민족 지도층 분열	127(18.0)
미국 제국주의 정책	79(11.2)
소련 팽창주의 정책	19(2.7)
잘 모름	8(1.1)
기타	56(7.9)
전체	707(100.0)

통일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남북을 둘러싼 4대 강국(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의 방해’(4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북측의 혁명전략 고수’(19.7%), ‘남측 정부 당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부족’(12.0%) 등을 많이 선택했다. 분단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장애요인에 있어서도 민족내부, 남북 양측 정부의 문제보다 주변 강대국과 관련된 원인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흔히 생각되어지는 ‘남북의 경제적 격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통일의 장애요인

문항	빈도
남한정부 의지부족	85 (12.0)
북한의 혁명전략	139 (19.7)
주변강 상호불신	38 (5.4)
남북의 경제적 격차	78 (11.0)
주변 4대 강국의 방해	313 (44.3)
잘 모름	18 (2.5)
기타	35 (5.0)
신체	706 (100.0)

<표 10> 통일의 방식

문항	빈도
남한의 흡수	262 (37.1)
북한의 우위	(0.0)
남북 대등	384 (54.4)
방식 무관	24 (3.4)
잘 모름	17 (2.4)
기타	19 (2.7)
신체	706 (100.0)

또한, 통일의 방식을 물어본 질문에는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54.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남측의 흡수통일’(37.1%)도 상당수 학생이 선택하였다(<표 10> 참조).

2)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포용해야할 동포’(58.6%), ‘주적이지만 동포’(31.9%) 등으로 응답했고(<표 11> 참조),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내외적 민주화 압력으로 점점 붕괴되고 있는 허약한 체제이다’(42.4%), ‘김일성 독재의 연장으로 쿠데타나 혁명으로 붕괴되어야 할 체제이다’(31.5%), ‘김정일의 지도력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는 강고한 체제이다’(11.6%) 등을 선택하였다(<표 12> 참조).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비

슷한 시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여론조사⁷⁾의 결과가 ‘포용해야 할 동포’(58.4%), ‘적이자 동포’(34.1%), ‘대치하는 적’(5.5%) 등의 순으로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북한에 대한 인식

문항	빈도
남한의 주적	11 (1.6)
주적이지만 동포	225 (31.9)
포용해야 할 동포	413 (58.6)
생각해 본 적 없음	26 (3.7)
잘 모름	11 (1.6)
기타	19 (2.7)
전체	705 (100.0)

<표 12>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

문항	빈도
붕괴되어야 할 독재정권	222 (31.5)
민주화압력으로 붕괴	299 (42.4)
주민지지 확보한 자주 체제	39 (5.5)
국제사회 대응 강고한 체제	82 (11.6)
잘 모름	37 (5.2)
기타	26 (3.7)
전체	705 (100.0)

북한의 개성공단 건설, 신의주 경제특구 개설 등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시범적 도입이다’(46.9%),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과정이다’(23.7%), ‘중국식 사회주의의 도입이다’(21.0%) 등으로 응답하였고(<표 13> 참조), 북한의 핵개발 이유에 대해서는 ‘체제생존 및 정권유지를 위해’(76.3%), ‘핵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14.6%) 등으로 응답했다(<표 14> 참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최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른 북한 핵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도입과 체제 및 정권 유지라는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북한의 경제개혁

문항	빈도
사회주의의 포기	21 (3.0)
자본주의의 시범적 도입	331 (46.9)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167 (23.7)
중국식 사회주의 도입	148 (21.0)
잘 모름	28 (4.0)
기타	11 (1.6)
전체	706 (100.0)

<표 14> 북한의 핵개발

문항	빈도
체제생존/정권유지	539 (76.3)
핵수출로 외화획득	17 (2.4)
전력난 해소	12 (1.7)
핵개발과 경제지원 연계	103 (14.6)
잘 모름	8 (1.1)
기타	27 (3.8)
전체	706 (100.0)

7) 2004년 9월 15일~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이하에서는 ‘민주평통 여론조사’)를 말한다.

3) 남북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남북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변화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자. 먼저 통일을 위해 북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방향으로 선택한 것은 ‘남한과 교류, 협력 확대’(56.7%), ‘북한의 개혁개방’(25.6%), ‘북한의 군사력 감축 및 핵 폐기’(9.9%) 등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남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방향으로는 ‘대북정책(현 평화변영 정책)의 구체적 실천노력’(30.4%),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 확대’(25.2%),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 구축’(17.4%),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17.2%) 등을 각각 선택하였다(<표 16> 참조).⁸⁾

<표 15> 북한의 변화 방향

문항	빈도
개혁 개방	180 (25.6)
군사감축/핵폐기	70 (9.9)
대미·대일 관계개선	39 (5.5)
남한과 교류협력 확대	399 (56.7)
잘 모름	5 (0.7)
기타	11 (1.6)
전체	704 (100.0)

<표 16> 남한의 변화 방향

문항	빈도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	123 (17.4)
대북정책 구체적 실천	214 (30.4)
남남갈등 해소	121 (17.2)
북한과 교류협력 확대	178 (25.2)
인도적 지원 확대	9 (1.3)
제체붕괴 유도	51 (7.2)
잘 모름	6 (0.9)
기타	3 (0.4)
전체	705 (100.0)

4) 미국 및 주변강대국에 대한 인식

남북을 둘러싼 주변 4강 가운데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11.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국가선택 이외에

8) 이러한 시각은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것들이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33.1%), ‘정치적 신뢰구축’(20.7%), ‘군사적 긴장 완화’(17.4%), ‘민간교류 확대’(15.5%),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12.7%)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최근의 경제협력과 남북교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인 교류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과는 분리되고 있고, 또한 우선시되고 있는 현재의 통일정책이 대학생들에게도 잘 이해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잘 모르겠음’(46.0%), ‘기타’(31.1%) 등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앞에서 통일의 장애요인을 물었던 질문에 ‘주변 4대강국의 방해’를 가장 많이 선택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표 17> 참조).

<표 17> 통일 우호국

문항	빈도
미국	30 (4.3)
일본	11 (1.6)
중국	40 (5.7)
러시아	81 (11.5)
잘 모름	324 (46.0)
기타	219 (31.1)
전체	705 (100.0)

<표 18> 통일 적대국

문항	빈도
미국	332 (47.3)
일본	109 (15.5)
중국	92 (13.1)
러시아	2 (0.3)
잘 모름	87 (12.4)
기타	80 (11.4)
전체	702 (100.0)

반면, 통일에 가장 적대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였다. 대학생들은 ‘미국’(47.3%), ‘일본’(15.5%), ‘중국’(13.1%) 등의 순으로 통일 적대국을 꼽았으며,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 1위(39.5%), ‘통일에 가장 필요한 국가’ 1위(50.7%)에 각각 선택되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표 18> 참조).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미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학생들의 반미감정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주한미군 주둔과 감축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37.7%), ‘더 감축해야 한다’(26.6%),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15.7%) 등으로 응답했으며, 철수나 감축에 찬성한 응답(42.3%)보다 현상유지, 증원, 그리고 감축에 반대하는 응답(48.0%)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9> 주한미군 철수

문항	빈도
완전 철수	111 (15.7)
간축 주문	188 (26.6)
현상 유지	266 (37.7)
간축 반대	58 (8.2)
증원 주문	15 (2.1)
잘 모름	49 (6.7)
기타	19 (2.7)
전체	706 (100.0)

<표 20> 한미관계의 평등성

문항	빈도
매우 평등	23 (3.3)
대체로 평등	11 (1.6)
대체로 불평등	239 (33.9)
매우 불평등	428 (60.6)
잘 모름	3 (0.4)
기타	2 (0.3)
전체	706 (100.0)

또한, 미국과의 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60.6%), ‘별로 평등하지 않다’(33.9%) 등의 불평등하다고 평가한 응답(94.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국, 주한미군의 주문문제와는 별도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대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 20> 참조).⁹⁾

5) 정상회담, 보안법 및 경협에 대한 인식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하는 편이 좋다’(57.9%), ‘당연히 해야 한다’(33.6%) 등의 응답을 하였다(<표 21> 참조).¹⁰⁾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질문에는 ‘폐지하되 대체 입법화(파괴활동금지법 등)’(34.4%), ‘개정하되 독소조항 폐지’(24.6%), ‘완전폐지’(19.5%), ‘폐지하되 형법에 보완’(15.4%) 등의 응답을 보였다(<표 22> 참조).¹¹⁾

9)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결과를 찾아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의 질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되, 통일 이후에 재조정해야 한다’(36.2%), ‘지나친 대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31.3%), ‘더욱 강화해야 한다’(18.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3.7%)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민주평통 여론조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84.6%)와 ‘불필요’(14.6%)의 결과를 보였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형식”을 묻는 질문에 41.9%의 응답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방’ 형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민주평통 여론조사’의 결과는 ‘유지하되 일부조항 근본적 개정(개정과 독소조항 폐지)’(49.1%), ‘폐지하되 형법/대체입법 보완’(33.4%), ‘전면폐지’(8.6%), ‘현

<표 21> 남한답방

문항	빈도
당연히 해야한다	237 (33.6)
하는 편이 좋다	409 (57.9)
할 필요 없다	41 (5.8)
적극 반대	2 (0.3)
잘 모름	11 (1.6)
기타	6 (0.8)
전체	706 (100.0)

<표 22> 국가보안법 폐지

문항	빈도
완전 폐지	138 (19.5)
폐지/대체입법	243 (34.4)
폐지/형법보완	109 (15.4)
독소조항폐지	174 (24.6)
현상 유지	11 (1.6)
잘 모름	27 (3.8)
기타	4 (0.6)
전체	706 (100.0)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대체로 바람직하다’(49.3%), ‘매우 바람직하다’(22.8%) 등 바람직하다는 의견(72.1%)이 지배적이었다(<표 23> 참조).¹²⁾

<표 23> 남북경협 평가

문항	빈도
매우 바람직	160 (22.8)
대체로 바람직	346 (49.3)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77 (11.0)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0 (1.4)
잘 모름	107 (15.2)
기타	2 (0.3)
전체	702 (100.0)

3. 통일교육의 적실성 평가

이 장에서 분석하는 통일교육의 적실성에 대한 평가는 ‘남북한정치쟁점’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그 학생들이 수강전과 수강 후 통일·평화의식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비교한다. 다만 전

행유지’(7.5%) 등으로 나타나,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민주평통 여론조사’의 결과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38.7%),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35.4%),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20.4%), ‘전면 중단해야 한다’(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학생들과의 비교와 다른 조사결과와의 비교는 필요에 따라 설명에서 추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통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이었던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강좌 수강여부에 따른 인식의 변화는 9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각각의 내용 면에서는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5.9%에서 83.7%로 크게 증가했고(+17.8%), 반면 ‘현 상태 유지가 좋다’(-7.3%)와 ‘통일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8.1%)는 응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표 24> 참조).

<표 24> 통일의 필요성

분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반드시 통일	81 (65.9)	103 (83.7)	184 (74.8)
현상유지	22 (17.9)	13 (10.6)	35 (14.2)
통일 반대	10 (8.1)	(0.0)	10 (4.1)
잘 모름	7 (5.7)	4 (3.3)	11 (4.5)
기타	3 (2.4)	3 (2.4)	6 (2.4)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5.763$ d.f=4 p=0.003 <0.005

이러한 변화는 김남식, 강정구 두 명의 연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특강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충분히 역설하였으며, 수강생들은 강좌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계속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남식은 특강에서 “통일은 훼손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2) 통일의 이유

반면, 김남식의 특강에서 강조된 바 있는 통일의 이유와 관련된 문항에 있어서는 ‘민족적 이유’(+3.2%), ‘평화정착을 위하여’(+1.1%) 등의

항목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질적인 빈도의 증가는 확인되었지만,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늘어나면서,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줄어든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25> 참조).

<표 25> 통일의 이유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21 (25.9)	30 (29.1)	51 (27.7)
평화정착을 위해서	29 (35.8)	38 (36.9)	67 (36.4)
이산을 극복	2 (2.5)	(0.0)	2 (1.1)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23 (28.4)	29 (28.2)	52 (28.3)
기타	6 (7.4)	6 (5.8)	12 (6.5)
전체	81 (100.0)	103 (100.0)	184 (100.0)

$\chi^2=2.901$ d.f=4 p=0.575 N.S

(3) 분단의 원인

분단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산물’(+11.4%), ‘우리 민족의 지도층 분열’(+4.9%) 등 항목이 증가하였고, ‘소련의 패권주의 정책의 산물’(-9.0%), ‘미소의 권력투쟁의 산물’(-4.0%) 등의 항목은 감소하였다(<표 26> 참조).

<표 26> 분단의 원인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미소의 권력투쟁	64 (52.0)	59 (48.0)	123 (50.0)
민족 지도층 분열	17 (13.8)	23 (18.7)	40 (16.3)
미국 제국주의 정책	18 (14.6)	32 (26.0)	50 (20.3)
소련 팽창주의 정책	12 (9.8)	1 (0.8)	13 (5.3)
잘 모름	3 (2.4)	2 (1.6)	5 (2.0)
기타	9 (7.3)	6 (4.9)	15 (6.1)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5.131$ d.f=5 p=0.010 <0.05

이러한 변화는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남식은 그의 특강에서 분단 당시의 미국 국무성과 육군성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분단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4)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의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남북의 경제적 격차’(+8.1%), ‘남한정부의 의지부족’(+6.6%), ‘남북 주민 간의 상호불신’(+2.4%) 등의 항목이 증가하였고, ‘북한의 혁명전략’(-14.6%), ‘주변 4대 강국의 방해’(-2.4%) 등 항목의 응답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표 27> 참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보다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통일의 장애요인

문항	시기		전체
	하기초	하기말	
남한정부 의지부족	19 (15.4)	27 (22.0)	46 (18.7)
북한의 혁명전략	26 (21.1)	8 (6.5)	34 (13.8)
주민간 상호불신	8 (6.5)	11 (8.9)	19 (7.7)
남북의 경제적 격차	7 (5.7)	17 (13.8)	24 (9.8)
주변 4대 강국의 방해	57 (46.3)	54 (43.9)	111 (45.1)
잘 모름	1 (0.8)	2 (1.6)	3 (1.2)
기타	5 (4.1)	4 (3.3)	9 (3.7)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6.087$ df=6 p=0.013 <0.05

(5) 통일의 방식

통일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이라는 응답은 크게 증가하였고(+21.2%), ‘남한의 흡수통일’을 선택한 응답은 크게 감소하였으며(-21.2%),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28> 참조). 김남식, 최완규, 강정구 등의 특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북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거나 주도하는 통일의 방식보다는 남북이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하고 선택하는 통일 방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통일의 방식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남한의 흡수	57 (46.3)	31 (25.2)	88 (35.8)
북한의 우위	(0.0)	1 (0.8)	1 (0.4)
남북 대등	57 (46.3)	83 (67.5)	140 (56.9)
방식 무관	3 (2.4)	1 (0.8)	4 (1.6)
잘 모름	3 (2.4)	5 (4.1)	8 (3.3)
기타	3 (2.4)	2 (1.6)	5 (2.0)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5.210$ d.f=5 p=0.010 <0.05

2)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포용해야할 동포’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고(+8.1%), ‘주적이지만 동포’라는 인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12.2%), 이는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표 29> 참조). 이러한 차이는 최완규가 그의 특강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고, 그러한 북한을 보는 본질적인 시각을 제시받은 학생들이 ‘북한이 남한의 주적’이라는 시각을 점차 줄여나가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북한에 대한 인식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남한의 주적	(0.0)	(0.0)	(0.0)
주적이지만 동포	28 (22.8)	13 (10.6)	41 (16.7)
포용해야할 동포	82 (66.7)	102 (82.9)	184 (74.8)
생각해 본 적 없음	7 (5.7)	3 (2.4)	10 (4.1)
잘 모름	2 (1.6)	1 (0.8)	3 (1.2)
기타	4 (3.3)	4 (3.3)	8 (3.3)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9.595$ d.f=4 p=0.048 <0.05

(2)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평가와 예측

<표 30>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인식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독재정권으로 붕괴되어야 한다	49 (39.8)	20 (16.3)	69 (28.0)
민주화압력으로 붕괴되고 있다	41 (33.3)	56 (45.5)	97 (39.4)
주민지지를 확보한 자주적 체제	13 (10.6)	15 (12.2)	28 (11.4)
국제사회 대응하는 강고한 체제	7 (5.7)	20 (16.3)	27 (11.0)
참 모름	6 (4.9)	7 (5.7)	13 (5.3)
기타	7 (5.7)	5 (4.1)	12 (4.9)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21.320$ d.f=5 $p=0.001 <0.005$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내외적 민주화 압력으로 점점 붕괴되고 있는 허약한 체제’(+12.2%), ‘김정일의 지도력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는 강고한 체제’(+10.6%),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가의 자주성을 자랑하는 체제’(+1.6%) 등의 시각이 증가하였고, ‘김일성 독재의 연장으로 쿠데타나 혁명으로 붕괴되어야 할 체제’라는 시각은 대폭 감소하였으며(-23.5%), 이는 9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표 30> 참조). 결국, 최완규의 특강은 학생들에게 북한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다양한 시각과 예측을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은 그러한 특강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이해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포기’(+11.4%), ‘자본주의 경제의 시범적 도입’(+4.0%) 등의 항목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였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도입’(-6.5%)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과정’(-4.9%) 등의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9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31> 참조). 유완영은 그의 특강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전달한 결과, 수강생들은 수강 전 3가지의 항목에 응답

했던 것과는 달리 4가지의 항목에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북한의 경제개혁이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사회주의의 포기	(0.0)	14 (11.4)	14 (5.7)
자본주의의 시범적 도입	58 (47.2)	63 (51.2)	121 (49.2)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37 (30.1)	31 (25.2)	68 (27.6)
중국식 사회주의 도입	19 (15.4)	11 (8.9)	30 (12.2)
잘 모름	7 (5.7)	2 (1.6)	9 (3.7)
기타	2 (1.6)	2 (1.6)	4 (1.6)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9.647$ d.f=5 p=0.001 <0.005

(4) 북한의 핵개발 이유

북한의 핵개발의 이유를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체제생존 및 정권유지를 위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고(+18.7%), ‘핵 무기 수출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핵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등의 응답이 각각 감소하였으며(각 -8.1%), 이러한 변화는 9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측정되었다(<표 32> 참조). 강정구는 특강에서 현재 대두되는 북한 핵위기의 원인과 진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였고, 수강한 학생들은 그러한 분석에 의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북한의 핵개발의 이유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체제생존/정권유지	77 (62.6)	100 (81.3)	177 (72.0)
핵수출로 외화획득	10 (8.1)	(0.0)	10 (4.1)
전력난 해소	5 (4.1)	6 (4.9)	11 (4.5)
핵개발과 경제지원 연계	22 (17.9)	12 (9.8)	34 (13.8)
잘 모름	2 (1.6)	2 (1.6)	4 (1.6)
기타	7 (5.7)	3 (2.4)	10 (4.1)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7.621$ d.f=5 p=0.003 <0.005

3)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변화 방향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대미·대일 관계 개선'(+6.5%), '군사력 감축 및 핵 폐기'(+0.8%) 등의 응답이 소폭 증가했고, '개혁개방'(-4.1%), '남한과의 교류, 협력 확대'(-1.6%) 등의 응답이 소폭 감소했다. 변화의 폭이 다소 좁은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33> 참조).

<표 33> 북한의 변화 방향

문항	시기		전체
	하기초	하기말	
개혁 개방	22 (17.9)	17 (13.8)	39 (15.9)
군사감축/핵폐기	10 (8.1)	11 (8.9)	21 (8.5)
대미·대일 관계개선	11 (8.9)	19 (15.4)	30 (12.2)
남한과 교류협력 확대	77 (62.6)	75 (61.0)	152 (61.8)
잘 모름	(0.0)	1 (0.8)	1 (0.4)
기타	3 (2.4)	(0.0)	3 (1.2)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6.848 \text{ d.f}=5 \text{ p}=0.232 \text{ N.S}$$

(2) 남한의 변화 방향

<표 34> 남한의 변화방향

문항	시기		전체
	하기초	하기말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	13 (10.6)	18 (14.6)	31 (12.6)
대북정책 구체적 실천	50 (40.7)	63 (51.2)	113 (45.9)
남남갈등 해소	15 (12.2)	21 (17.1)	36 (14.6)
북한과 교류협력 확대	33 (26.8)	13 (10.6)	46 (18.7)
인도적 지원 확대	(0.0)	1 (0.8)	1 (0.4)
제제방괴 유도	12 (9.8)	4 (3.3)	16 (6.5)
잘 모름	(0.0)	(0.0)	(0.0)
기타	(0.0)	3 (2.4)	3 (1.2)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9.998 \text{ d.f}=6 \text{ p}=0.003 <0.005$$

반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대북 정책의 구체적 실천노력’(+10.5%),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4.9%),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 구축’(+4.0%),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0.8%) 등의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고,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 확대’(-16.2%), ‘김정일 체제의 붕괴 유도’(-6.5%) 등의 응답이 다소 감소하였다(<표 34>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북한의 변화 방향과는 달리 남한의 변화 방향은 9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완규, 강정구, 유완영 등의 특강에서 북한의 변화 방향은 예측을, 남한의 변화 방향은 요구를 하는 차이를 보였고, 그러한 강도의 차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변화 정도가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미국 및 주변강대국에 대한 인식

(1) 통일 우호국

주변 4대 강국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국가와 적대적인 국가를 찾는 질문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를 찾는 질문에는 ‘러시아’(+4.1%)를 제외한 3국가 모두 응답이 감소하였고(각 -0.8%), 이러한 변화는 그 증감의 폭이 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35> 참조).

<표 35> 통일 우호국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미국	1 (0.8)	(0.0)	1 (0.4)
일본	2 (1.6)	1 (0.8)	3 (1.2)
중국	17 (13.8)	16 (13.0)	33 (13.4)
러시아	17 (13.8)	22 (17.9)	39 (15.9)
잘 모름	47 (38.2)	56 (45.5)	103 (41.9)
기타	39 (31.7)	28 (22.8)	67 (27.2)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4.597 \text{ d.f}=5 \text{ p}=0.467 \text{ N.S}$$

(2) 통일 적대국

반면, 통일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를 찾는 질문에는 ‘미국’(+22.0%), ‘러시아’(+0.8%) 등의 응답이 증가하였고, ‘중국’(-10.6%), ‘일본’(-4.9%) 등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가 99%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36> 참조). 이러한 우호국·적대국 변화의 차이는 김남식, 강정구의 특강에서 제시된 해방전후의 미국과 소련의 역할, 특히 분단과 관련된 미소의 입장과 의도 등의 내용이 수강자들의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통일 적대국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미국	62 (50.4)	89 (72.4)	151 (61.4)
일본	14 (11.4)	8 (6.5)	22 (8.9)
중국	27 (22.0)	14 (11.4)	41 (16.7)
러시아	(0.0)	1 (0.8)	1 (0.4)
잘 모름	9 (7.3)	8 (6.5)	17 (6.9)
기타	11 (8.9)	3 (2.4)	14 (5.7)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6.216$ d.f=5 p=0.006 <0.01

(3) 6자회담의 기여정도

최근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기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크게 기여한다’(+9.8%), ‘대체로 기여한다’(+8.5%)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증가하였고, 나아가 ‘긍정적 평가(39.1%) < 부정적 평가(43.1%)’의 학기 초의 결과와는 달리 ‘긍정적 평가(57.4%) > 부정적 평가(35.2%)’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9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표 37> 참조). 강정구는 그의 특강에서 미국 주도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수강학생들은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6자회담의 복핵문제 기여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크게 기여	4 (3.3)	16 (13.1)	20 (8.2)
대체로 기여	44 (35.8)	54 (44.3)	98 (40.0)
대체로 기여 못함	48 (39.0)	32 (26.2)	80 (32.7)
전혀 기여 못함	5 (4.1)	11 (9.0)	16 (6.5)
잘 모름	20 (16.3)	8 (6.6)	28 (11.4)
기타	2 (1.6)	1 (0.8)	3 (1.2)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9.143$ d.f=5 p=0.002 <0.005

(4) 주한미군 철수

<표 38> 주한미군 철수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완전 철수	41 (33.3)	49 (39.8)	90 (36.6)
감축 주둔	30 (24.4)	29 (23.6)	59 (24.0)
현상 유지	35 (28.5)	31 (25.2)	66 (26.8)
감축 반대	4 (3.3)	4 (3.3)	8 (3.3)
중원 주둔	1 (0.8)	1 (0.8)	2 (0.8)
잘 모름	10 (8.1)	7 (5.7)	17 (6.9)
기타	2 (1.6)	2 (1.6)	4 (1.6)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500$ d.f=6 p=0.960 N.S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수해야한다’라는 응답이 조금 증가하였지만(+6.5%), 나머지 응답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3.3%), ‘더 감축해야한다’(-0.8%) 등으로 조금 감소하였다. 그 변동의 폭이 좁게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표 38> 참조). 특강의 내용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시각을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대학생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철수, 감축 등의 시각으로 조성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시각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리 특이하지 않게 판단된다.

(5) 한미관계의 평등성

한미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평가(17.1%)가 크게 감소하였고(-11.4%), 반면 부정적인 평가(82.1%)는 크게 증가하였다(+11.5%).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변화는 99.9%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39> 참조). 김남식과 강정구는 그들의 특강에서 한미관계의 변화과정, 한미동맹에 대한 본질 등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제시하였고, 수강자들은 이러한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한미관계의 평등성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매우 평등	20 (16.3)	(0.0)	20 (8.1)
대체로 평등	1 (0.8)	7 (5.7)	8 (3.3)
대체로 불평등	19 (15.4)	39 (31.7)	58 (23.6)
매우 불평등	82 (66.7)	76 (61.8)	158 (64.2)
잘 모름	(0.0)	(0.0)	(0.0)
기타	1 (0.8)	1 (0.8)	2 (0.8)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31.624$ d.f=4 $p=0.000 <0.001$

5) 정상회담, 보안법 및 경협에 대한 인식과 통일 이후에 대한 인식

(1)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답방에 대한 질문에서는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감소(-9.0%)한 반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고(+16.3%), 이러한 변화는 99%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로 검증되었다(<표 40> 참조). 임동원은 그의 특강에서 통일부 장관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수강생들은 이러한 특강에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0>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한답방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당연히 해야한다	46 (37.4)	66 (53.7)	112 (45.5)
하는 편이 좋다	66 (53.7)	55 (44.7)	121 (49.2)
할 필요 없다	7 (5.7)	1 (0.8)	8 (3.3)
적극 반대	(0.0)	(0.0)	(0.0)
잘 모름	(0.0)	1 (0.8)	1 (0.4)
기타	4 (3.3)	(0.0)	4 (1.6)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4.071$ d.f=4 p=0.007 <0.01

(2)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정하되 독소조항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감소하였고(-15.5%), ‘폐지하되 형법에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금 감소하였다(-4.1%). 반면, ‘폐지하되 대체입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금 증가하였고(+1.6%),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증가하였다(+18.7%). 이러한 증감은 유의수준 99%에서 유의미한 변화로 검증되었다(<표 41> 참조).

<표 41> 국가보안법 폐지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완전 폐지	26 (21.1)	49 (39.8)	75 (30.5)
폐지/대체입법	23 (18.7)	25 (20.3)	48 (19.5)
폐지/형법보완	23 (18.7)	18 (14.6)	41 (16.7)
독소조항폐지	44 (35.8)	25 (20.3)	69 (28.0)
현상 유지	1 (0.8)	3 (2.4)	4 (1.6)
잘 모름	6 (4.9)	2 (1.6)	8 (3.3)
기타	(0.0)	1 (0.8)	1 (0.4)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6.978$ d.f=6 p=0.009 <0.01

특강에서 서승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강의를 했었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수강생들이 갖고 있던 평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남북 경제협력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응답은 ‘매우 바람직하다’와 ‘대체로 바람직하다’ 등의 긍정적 평가(70.0%)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부정적 평가(4.1%)간의 폭(65.9%)이 긍정적 평가(87.0%)와 부정적 평가(4.1%)의 수준(82.9%, +17.0%)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99%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2> 참조). 유완영은 특강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간의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 역설했고, 이러한 영향으로 수강생들의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남북경협 평가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매우 바람직	28 (22.8)	45 (36.6)	73 (29.7)
대체로 바람직	58 (47.2)	62 (50.4)	120 (48.8)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5 (4.1)	4 (3.3)	9 (3.7)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0.0)	1 (0.8)	1 (0.4)
잘 모름	31 (25.2)	11 (8.9)	42 (17.1)
기타	1 (0.8)	(0.0)	1 (0.4)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5.727$ d.f=5 p=0.008 <0.01

(4) 통일 이후 국호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위한 국호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가 크게 감소(-11.1%)한 반면, ‘조선’을 선택한 응답자는 조금 증가(+1.6%), ‘고려’와 ‘코리아’를 선택한 응답자는 다소 많이 증가(각 +8.1%)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유의수준 9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3> 참조).

국호에 대한 강의는 2004년 『한국민족문화』에 ‘국호 논쟁’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던 허열 박사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 강의에서 남북의 건국 당시 등의 시기에 진행되었던 ‘국호논쟁’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였고, 그러한 남북 각 국호의 정통성 경쟁을 이해하게 된 수강생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선호 대신에, 다른 국호들에 대한 폭넓은 선호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허열 박사는 대한민국의 국호가 제헌의회에서 결정되기 전 해방공간의 민중들은 조선을 통칭하고 있었으며 중국, 일본 등 외국들은 현재까지도 조선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조선으로 인식이 변화하기보다 다른 코리아나 고려 쪽으로 더욱 변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가 진보적으로 변화하면서도 현재 조선이 북한의 국호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표 43> 통일 이후 국호

문항	시기		전체
	학기초	학기말	
대한민국	55 (44.7)	29 (23.6)	84 (34.1)
조선	16 (13.0)	18 (14.6)	34 (13.8)
고려	16 (13.0)	26 (21.1)	42 (17.1)
코리아	13 (10.6)	23 (18.7)	36 (14.6)
잘 모름	13 (10.6)	17 (13.8)	30 (12.2)
기타	10 (8.1)	10 (8.1)	20 (8.1)
전체	123 (100.0)	123 (100.0)	246 (100.0)

$$\chi^2=13.857 \text{ d.f}=5 \text{ p}=0.017 <0.05$$

4. 마치며: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 본 ‘대학생들의 수업 수강 효과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이해, 최근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이해, 북한의 핵개발 이유에 대한 평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기여도, 한미관계의 평등성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는 수강 이후 상당한 변화(유의수준 99.5% 이상)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단의 원인에 대한 이해,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통일의 방식에 대한 시각, 북한에 대한 인식,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를 구별하는 문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에 대한 견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시각,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 통일 이후 한반도의 국호에 대한 견해 등의 문제는 수강 이후 다소 차이(유의수준 95% 이상)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한학기라는 다소 긴 시간을 두고 행해진 조사이며,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해당 수업만을 수강한 것이 아니기에, 변화의 이유를 해당 수업 수강 효과로 전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각 문항에 대한 기존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와 시각들이 수업에 의해 변화했음을 말하기에는 또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정치·경제체제, 핵개발문제 포함)에 대한 시각, 주변 국가이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시각,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남한정부와 사회에 대한 시각들이 변화하였다는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통일의 이유에 대한 견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방향에 대한 인식,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를 구별하는 문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시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강 이전과 이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들은 대학생들의 의식이 이미 여론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 보여 진다.

수업에 사용된 기재들이 기존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에 의해 가공된 교재나 논문이 아닌, NGO 참여자, 운동가, 정부당국의 전직관료, 학계의 연구자 등의 다양한 경험과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수업과는 달리 (다양하기보다는)보다 폭넓은 경험의 공유를 통한 시각의 확대가 단순한 지식전달에서 야기되는 인식의 변화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체험자의 경험을 포함한 확대된 시각의 전달은 그 동안 정치적인 사안이나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절여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대학생들에게도 인식과 사고의 변화에 대한 기회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통일교육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내용의 진보성에 따라 학생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의수준의 기준에서 <통일이유>, <북한의 변화방향>,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 <주한미군철수> 등 4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95% 이상이 7문항, 99.5%가 9개 문항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의 방식과 교육내용 중 어떤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확인은 어렵다. 강의에 있어서 방식은 형식인데 비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강의는 내용에 속한다. 물론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하에 교수법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법이 작용한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강의의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고 진보적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보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요인의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른 연구방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또한 지적될 만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뉴콤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지만, 뉴콤이 연구한 추적조사를 통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평화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10~20년 후의 추이를 살펴 교육을 통한 통일·평화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또 다른 준비와 계획을 통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화된 통일교육이 방식과 내용은 통일에 대한 '무의식적 필요성'¹³⁾을 느끼고 주장하는 분단 1세대들과는 구별되는 이른바 '신세대'들의 통일의식에 보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보다 생동감 있고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도 강렬한 자극을 주면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통일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보다 확대된 경험과 시각의 공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13) 직접 분단을 경험하고, 이산의 아픔 등을 현재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

‘진보’해야 하며, 이러한 통일에 대한 지식의 다양성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통일교육이 확대됨으로써, ‘정부당국자들과 주변국가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아오던’ 통일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대중의 생활공간으로 스며들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담론으로 전이되게 하고, 결국에는 통일의 필요성을 자각한 대중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의 결집이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의 열쇠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주요어: 통일, 통일교육, 통일교육평가, 대학생통일의식, 대학생의식조사.

참고문헌

- Yeric, Jerry L. · Todd, John R., *Public Opinion: The Visible Politics*, Illinois: Peacock, 1996.
- Newcomb, Theodore M. et al., *Persistence and Change: Bennington College and Its Students After Twenty-Five Year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 강병서, 『사회과학 통계분석』, 데이터솔루션, 2001.
-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2004.
- 김근식, 『통일·남북관계 사전』, 통일연구원, 2004.
- 김석우,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SPSS WIN 10.0 활용의 실제』, 교육과 학사, 2003.
- 김영하, 「통일관련 교양강좌 교수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제3호, 대한정치학회, 2005.
- 김응렬, 『사회조사 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김형배, 「체험중심의 학교 통일교육」, 『교육정책포럼』 제106호, 한국교육개발원, 2005.
- 성태제,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사회·경험과학』, 교육과학사, 2002.
- 이시형·정현수, 『화해협력시대의 남북한관계론』, 인간사랑, 2004.
- 임동원, 「통일국가의 모습과 통일추진과정: 현재진행형으로서의 통일과 6·15남북공동선언: 통일교육」, 『자유공론』 제39권 제9호, 한국자유총연맹, 2004.
- 차종환 외, 『남북통일과 평화교육』, 나남출판사, 2005.
- 최진봉, 「통일·안보의식조사: 신세대 대학생들의 통일·안보의식 조사연구」, 북한연구소 편, 『북한』 제298호, 북한연구소, 1996.
- 통일연구원, 『통일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통일연구원, 2004.
- _____,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 한승준, 『사회조사방법론』, 대영문화사, 2000.
- 민주평통 여론조사 참고 자료
- 「대학생 평화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2004. 6. 2.)
- 「2004년 제3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04. 9. 24.)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Unification View by Method and Contents of Education for Unification · Peace

Chung, Yong-Ha · Kim, Tae-Wan

We are analyzing the effects of how does college student's view of unification and peace changes by method and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We invited progressive persons who have unrestricted thoughts about N.Korea and took parts in actual business for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contents and style of this lecture are different to ordinary unification education. we also analyzed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students who took the class about awareness toward unification and peace.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It showed that unification education is improved, effected much student's recognition of unification and peace. Especially, the seven questions were 95% or more, nine questions were 99% in level of significance except five questions that are reason of unification, changing direction of N. Korea, friendly state toward unification and withdrawal of US army from Korea.

By the result, we assume that the unification education effected change of student's recognition toward unification and peace. But, we can't measure which one effected more between method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conclusion, we assume that change in method and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influenced recognition of students. And these changes will greatly effect those who are called 'The New Generation'

*** Key Words:** unification, education for unification, evaluation of education for unification, unification-peace view of college students, survey of unification-peace view.

부 록

<특강 연사와 강의 주제>

일자	강사	강사직책	주제
9월 2일	정용하	담당교수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 (통일·평화의식조사)
9월 9일	이시우	작가	민통선 통일기행(DMZ의 정치학, 접경지역의 화해와 협력)
9월 16일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	8·15해방과 분단
9월 23일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 부원장	오늘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9월 30일	정용하	담당교수	북한에 대한 이해: 토론 및 질의 응답(Brain Writing)
10월 7일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북핵문제와 6자회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의 변화
10월 14일	유완영	유니코텍 대표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 전망
10월 21일			중간고사
10월 28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6·15남북공동선언>과 화해협력정책
11월 4일	서승	일본 立命館대 교수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
11월 11일	정용하	담당교수	조별 모의 6자회담과 정상회담
11월 18일	홍성담	민중화가	민중미술, 통일미술로 바라본 통일
11월 25일	허열	부산대 강사	국호논쟁 및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평가
12월 2일	정용하	담당교수	전체 토론: 통일 이후의 체계, 정체, 대통령, 수도 등 (통일·평화의식조사)
12월 9일			기말고사

※ 각 특강 강연 원고의 전문은 부산경남통일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http://uniedu.busan.kr>) 참조.

- ③ 대미, 대일 관계 개선 ④ 남측과의 교류, 협력 확대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12.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 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 구축 ② 북측과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 확대
③ 대북정책(평화번영 정책)의 구체적 실천노력 ④ 김정일 체제의 붕괴 유도
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 ⑥ 기타()
⑦ 잘 모르겠음 ⑧ 기타()

IV. 미국 및 주변강대국에 대한 인식

13. 남북을 둘러싼 주변 4강 가운데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14. 남북을 둘러싼 주변 4강 가운데 통일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15.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볼니까?
 ① 크게 기여한다 ② 대체로 기여한다 ③ 대체로 기여하지 않는다
 ④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16. 주한미군은 1만 2천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향후 2만 5천명 정도가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② 더 감축해야 한다 ③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④ 감축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⑤ 더 증원해야 한다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
17.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평등하다 ② 대체로 평등하다 ③ 별로 평등하지 않다
 ④ 전혀 평등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V. 정상회담, 보안법 및 경협에 대한 인식

18.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남측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당연히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할 필요 없다
 ④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19.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완전폐지 ② 폐지하되/대체 입법화(파괴활동금지법 등)
 ③ 폐지하되/형법에 보완 ④ 개정하되/독소조항 폐지
 ⑤ 그대로 유지해야 함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
20.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대체로 바람직하다 ③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④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VI. 통일 후 남북체제에 대한 인식

21. 통일 이후 남북체제는 어떠한 권력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니까?
 ① 대통령제 ② 의원내각제 ③ 이원집정부제
 ④ 회의제 정부(구 소련식)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22. 남북통일 이후 어떠한 정치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니까?
 ① 자본주의 ② 사회주의 ③ 사회민주주의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3. 남북통일 이후 어떤 국호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니까?
 ① 대한민국 ② 조선 ③ 고려
 ④ 코리아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기초자료>

24. 성별: ① 남 ② 여
25. 연령: ① 20세 미만 ② 20세 ③ 21세 ④ 22세 ⑤ 23세 ⑥ 24세

- ⑦ 25세 이상
26.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7. 소속단체: ① 인문대 ② 사회대 ③ 자연대 ④ 공대 ⑤ 법대 ⑥ 사범대 ⑦ 상대
 ⑧ 생활환경대 ⑨ 예술대 ⑩ 약대 ⑪ 기타
28. 병역필 유무(남학생에 한함): ① 병역필 ② 병역미필 ③ 기타
29. 수강과목: ① 남북한정치쟁점 ② 통일문제특강 ③ 청강
 ④ 기타 북한 및 통일관계 강좌 ⑤ 수강하지 않음
30. 현재 들고 있는 <남북한 정치쟁점>이나 <통일문제특강> 이외 남북관계 및 통일
관계 관련강좌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2004년 1학기 이전): ① 있다 ② 없다
31.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와 보수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5점~1점)?
 진보←⑤————④————③————②————①→보수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10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18일